

## Global Market Report

---

# 2016 호주 조기 총선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

---



# CONTENTS

## 목 차

### 요 약 / 1

---

#### I. 호주 의회제도 현황 및 조기총선 2

---

- 2 | 1. 호주 의회제도 현황
- 5 | 2. 조기총선 결과

#### II. 총선 결과에 따른 주요정책 및 예상효과 7

---

- 8 | 1. 세금
- 9 | 2. 의료
- 10 | 3. 환경 · 재생에너지
- 12 | 4. 농업
- 14 | 5. 인프라

#### III. 주요 산업별 반응 16

---

#### IV. 시사점 20

---

- 20 | 1. 우리기업에 대한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
- 24 | 2. 시사점

## 요 약

### □ 2016 호주 조기총선 결과

- 집권여당인 자유국민연합, 하원의석 150석 중 절대 과반인 76석 확보
  - 1987년 이후 29년 만에 상하원 의석 동시 해산 및 교체
  - 집권여당 의석수는 2013년 총선 대비 14석 줄어 2기 정부의 정책추진력 약화 우려

### □ 자유국민연합 주요 공약

정책	주요 내용
세금	법인세 인하, 소득세 감면
의료	공공병원 지원금 확대, 영상진단/혈액검사 비용 인상
환경·재생에너지	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목표 보수적 설정
농업	외국인 농지투자자 조사기준 강화,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소득세 인상
인프라	전국 500억 규모 인프라 사업, 광통신망 사업 지속

### □ 주요 산업별 반응

- (자동차) 자동차업계, 4,000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 기대
- (건설) 호주건설위원회(ABCC) 재발족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
- (식품) 2016-17 예산안 및 법인세·소득세 인하 환영
- (광산) 법인세·소득세 인하 및 환경·재생에너지 보수적 목표 설정 환영
- (재생에너지)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목표 설정에 긍정적으로 반응

### □ 시사점

- (기회요인) 우리나라 현지 진출기업 법인세 인하 조치 수혜, 자동차·가전·의료 소모품·재생에너지·건설시장 유망
- (위협요인) 영상진단기기 및 병리학 제품 수요 감소, 호주 농지 구매 조사 강화, 워킹홀리데이 관련 세금 부담 급증
- (시사점) 우리기업 對호주 비즈니스에 유리, 유망시장 공략 기회 확대

## 호주 의회제도 현황 및 조기총선

### 1. 호주 의회제도 현황

#### □ 정치 체제 : 美 연방제도 + 英 내각책임제, 의회의 상하양원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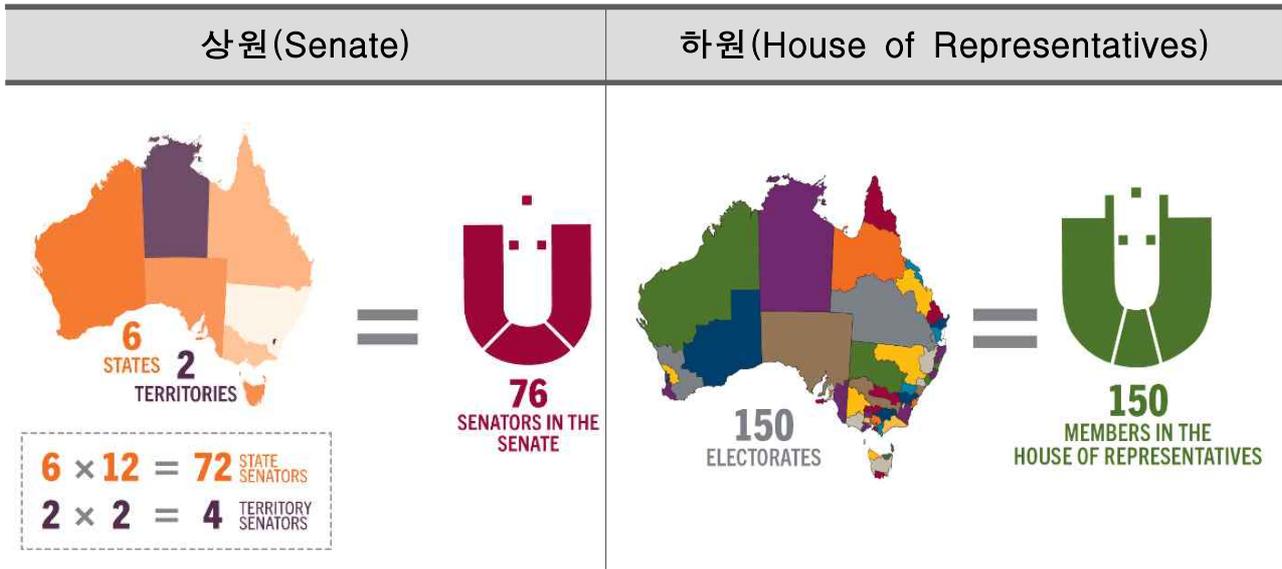
-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식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형태
  - 연방정부와 주정부(6개 주 및 2개 준주)로 구성됨
  - 호주의 국가원수는 형식상 영국여왕이나 실질적으로는 연방총독이 여왕을 대신하여 국가원수 기능을 수행
    - \* 연방총독 권한 : 외국 국가원수와 대사 접견, 내각선서, 의회개원, 의회 소집·정회·해산, 법률안 동의 및 거부, 각료 임명·사면, 국군통수권 보유
- 호주 의회 上·下 양원제로 구성
  - 법안은 상·하 양원 모두 통과하고 총독 승인 후 성립
    - \* 조세 관련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제안, 그 외 법안은 상·하원 모두 제안 가능

#### □ 선거제도 : 상원(대선거구-비례대표제), 하원(소선거구-선호투표제)

- 의무 선거제도 시행으로 지난 10년 간 90% 이상의 투표율 유지
  - 18세 이상의 호주시민은 선거관리위원회(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)를 통해 선거명부에 등록됨
  - 선거명부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거권이 있는 호주 시민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최초 20 호주달러의 벌금 부과. 2회 이상 투표 불참 시 50 호주달러 벌금 부과
    - \* 투표 당일 해외 체류 시,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외 체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우편을 통한 사전투표가 가능

- 상원 선거제도 : 대선거구제, 비례대표제
  - 대선거구제 : 6개 주와 2개의 준주가 각각 하나의 대선거구 구성
  - 비례대표제 : 국민들의 정당선호투표
  - 6개 주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을 12명씩 선출, 2개 준주 임기 3년의 상원의원을 2명씩 선출하여 총 76명 상원 구성
  
- 하원 선거제도 : 소선거구제, 선호투표제
  - 소선거구제 : 인구비례에 의한 150개 선거구 구성
  - 선호투표제 : 후보 우선순위 기재해 투표
  - 임기 3년의 150명 의원 하원 구성

< 호주 상·하원 선출 시스템 >



[자료원: 국회교육사무소(Parliamentary Education Office) 홈페이지]

□ 주요 정당

명칭 및 로고		자유당 (Liberal Party of Australia) 	노동당 (Australian Labor Party) 
설립년도		1944	1901
현 당대표		Malcolm Turnbull	Bill Shorten
정당 색		파란색(Blue)	빨간색(Red)
홈페이지		www.liberal.org.au	www.alp.org.au
의석수	상원	27(자유연합, 2016.7.25.현재)	23(2016.7.25.현재)
	하원	76(자유연합, 2016.7.25.현재)	68(2016.7.25.현재)
이념		보수주의	민주사회주의
특징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합(Coalition)당 소속 주요 정당</li> <li>- 노동당의 의회진출에 자극받은 업계가 이익단체를 형성, 현재 자유당의 기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존 호주정당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호주 최초 근대정당</li> </ul>
지지기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소득층, 중산층, 노동자층 등으로 다양</li> <li>- 주요 재정적 지지기반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집중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민, 공무원, 노동자, 전문직 종사자 등 중산층 다수</li> <li>- 블루칼라(blue-collar) 계층 전반</li> </ul>
주요정책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유 기업체제 장려</li> <li>- 개인의 자유 진작</li> <li>- 중산층 및 고소득자들의 세금 혜택</li> <li>- 자원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실질적 고용창출 실현</li> <li>- 효과적인 노사관계의 발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회 구성원의 정치, 경제 참여 등, 권력의 재분배</li> <li>- 고소득자들에 높은 세금 부과 등, 부의 재분배</li> <li>- 개인평등의 실현</li> <li>- 노사관계 발전 및 산업 내 민주주의 실현</li> <li>- 난민 수용 및 문화적 다양성 증진</li> </ul>

\* 7월 25일 현재, 상원 : 89.1% 개표 기준, 하원 : 90.9% 개표 기준

## 2. 조기총선 결과

### □ (배경) 호주 29년만의 상하양원 동시 해산 및 교체

- 1987년 이후 29년 만에 상하원 의석 동시 해산 및 교체
  - 2016. 7. 2일 조기 총선 실시, 역대 최장 기간(8주) 선거운동 진행
  - 상하의원 임기(6년 · 3년)에 따라 절반만 교체되었던 총선과는 달리, 이번 총선은 상하원 동시 해산으로 전체 의석 교체
- 호주건축건설위원회(ABCC : 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) 재설립 안건의 2차 부결로 상하양원 동시 해산
  - \* 호주 법률상(헌법 57조/Section 57 of the Constitution)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원에서 두 차례 부결될 경우, 양원 해산 · 조기 총선 실시 가능

### □ (결과) 자유국민연합 단독 과반의석 확보로 재집권 성공

- 자유국민연합, 하원 150의석 중 절대 과반인 76석을 확보
  - 자유국민연합과 노동당이 박빙의 대접전을 벌이며 13일간의 개표를 통해 자유국민연합의 승리가 선언됨
  - 개표 중 후반까지 형의회(Hung Parliament)\*에 가능성이 예측되었으나, 부재자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에서 자유국민연합이 우세
  - \* 형의회 : 어느 정당도 과반 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, 주요 정당(자유국민연합, 노동당)이 소수/무소속 정당과 연합하여 여당으로 집권

### □ (전망) 호주 턴블 총리 2기 정부의 정책 추진력 약화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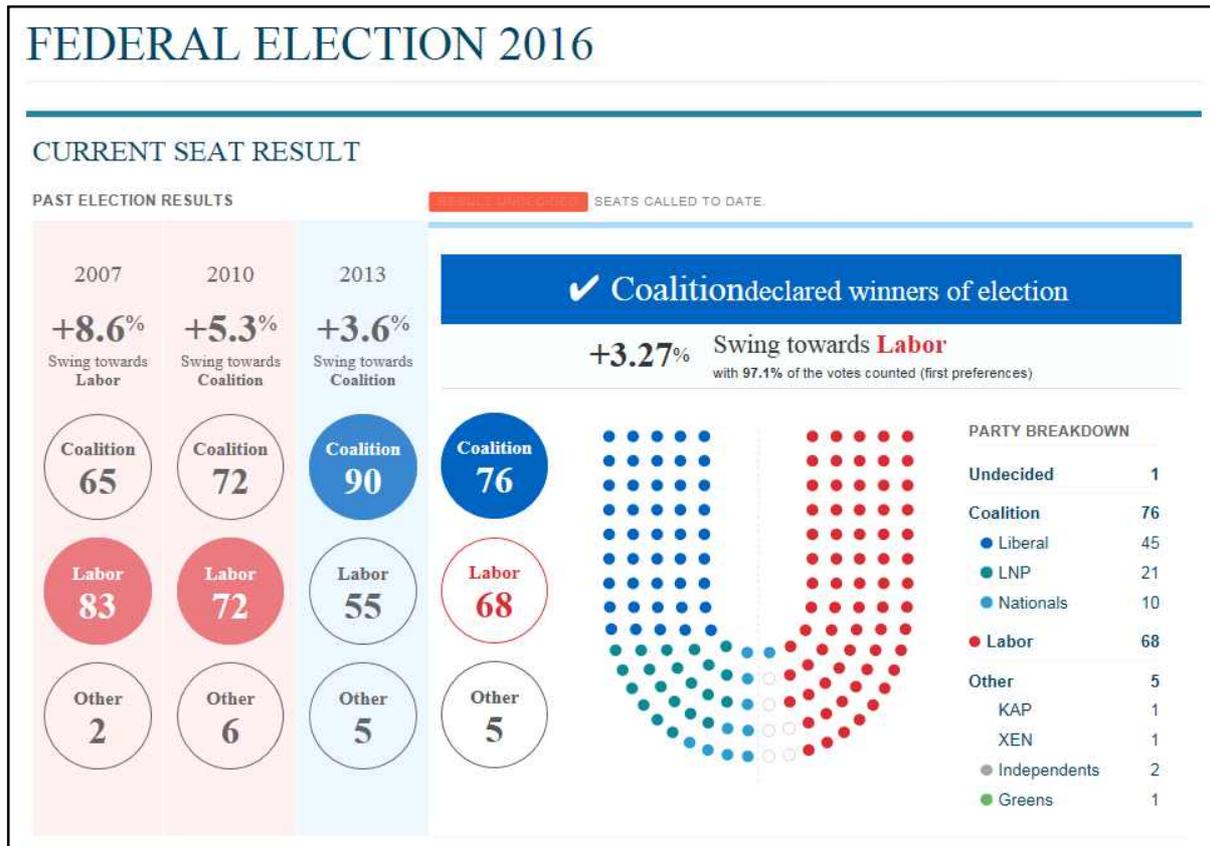
- 자유국민연합, 2013년 총선 대비 14석 손실
  - 집권 말콤 턴블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, 난민 및 의료비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지지세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

< 정당별 하원 득표율 및 의석 수 >

정당	당수	득표율	의석수
자유국민연합 (Liberal/National Coalition)	Malcolm Turnbull	42.1%	76
노동당 (Australian Labor Party)	Bill Shorten	34.7%	68
녹색당 (The Greens)	Richard Di Natale	10.2%	1
닉 젠 폰 팀 (Nick Xenophon Team)	Nick Xenophon	1.8%	1
캐터스 호주당 (Katter's Australian Party)	Bob Katter	0.5%	1
미확정 (Seats in Doubt)			
기타		10.5%	2
합계		100%	150

- \* 7월 25일 현재, 90.9% 개표 기준, Herbert 지역 의석 1석 미확정
- \* [자유국민연합 구성] 자유당(Liberal): 45석, 자유국민당(Liberal National Party): 21석, 국민당(The Nationals): 10석, 자유국가당(Country Liberals): 0석

< 지난 총선 결과와의 비교 >



[자료원 : 호주신문 The Australian]

## II 총선 결과에 따른 주요정책 및 예상효과

2016 호주 조기 총선 기간(2016.5.8~7.2.)의  
자유국민연합, 노동당 공약에 근거하여 정책 방향 및 예상 효과 분석

### 1. 세금 정책

- (1) 법인세 : 향후 10년 간 현행 28.5%에서 25%로 인하
  - (2) 소득세 : 차상위 소득세 구간 확대(37,001-80,000 → 37,001-87,000 호주달러)
- [예상효과] 투자 증가 및 소비 진작을 통한 호주 경기 부양 효과

### 2. 의료 정책

- (1) 공공병원 지원 : 향후 3년 간 29억 호주달러(약 2조 4706억원) 배정
  - (2) 영상진단·혈액검사 지원금 삭감 : 2016. 7월부 6억 5천만 호주달러 삭감
- [예상효과] 의료기기 수요 증가, 영상진단·혈액검사 비용 국민 부담 증가

### 3. 환경·재생에너지 정책

- (1) 온실가스 감축 :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05년 대비 26~28% 축소  
- 온실가스 감축 기업 보상을 위한 25억 호주달러(약 2조 1,298억원) 배정
  - (2) 재생에너지 :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률 20% 달성 (2015년 14.6%)
- [예상효과]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 경감,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

### 4. 농업 정책

- (1) 외국인 호주 농지 투자 관련 : 한중일 투자자 대상 정밀 조사 기준 강화
  - (2)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소득세 인상 : 0~80,000 소득 구간 대상 32.5% 과세
- [예상효과] 세수 손실 회복, 호주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수 감소

### 5. 인프라 정책

- (1) 전국적 인프라 사업 : 전국 500억 규모의 주요 프로젝트 지속 추진
  - (2) 광통신망 인프라 프로젝트 : FTTN 방식으로 지속 추진
- [예상효과] 일자리 창출, 용접·건설자재·철광 관련 제품 수요 증가

## 1 세금 정책 : 법인세 인하, 소득세 감면

### □ 법인세 인하에 따라 해외기업들의 투자유치 확대 기대

- (자유국민연합) 향후 10년 간 현행 28.5%에서 25%로 하향 조정
  - ① 연 매출액 1천만 호주달러 미만의 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를 2016-17년에 현행 28.5%에서 27.5%로 하향 조정
  - ②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에 대해 2026-27년까지 25%의 단일법인세를 적용
- (노동당) ① 관련, 연 매출액 1천만 호주달러 미만 소기업을 2백만 미만 소기업으로 변경, 법인세 인하 대상을 축소해야한다 주장
- (예상효과) 해외기업들의 투자유치 확대, 경기 부양효과 기대
  - 현지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기업들의 투자유치 증대로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점진적 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

### □ 중산 · 고소득층 소득세 감면에 따른 소비 진작 도모

- (자유국민연합) 차상위 소득세 구간 확대, 한시적 적자세 폐지
  - ① 2번째로 높은 소득세(32.5%) 구간의 소득 범위를 2019-20까지 기존 37,001-80,000 호주달러에서 37,001-87,000 호주달러로 확대
  - ② 2017. 7. 1일부 종료 예정인 한시적 적자세(Temporary deficit levy)\* 폐지
- \* 연 수입 18만 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에 대해 2%의 추가 세금 부과
- (노동당) 차상위 소득세 구간 및 한시적 적자세 현행유지 주장
- (예상효과) 혜택 계층의 소비 진작, 경기부양 효과 기대

#### < 2012-16 호주 GDP 성장률 동향 >

2012	2013	2014	2015	2016(Q1)
3.6	2.1	2.7	2.4	3.1

[자료원 : RBA(Reserve Bank of Australia)]

## 2 의료 정책 : 공공병원 지원금 확대, 영상진단/혈액검사 비용 인상

### □ 공공병원에 대한 추가 지원금, 향후 3년간 29억 호주달러 배정

- (자유국민연합) 향후 3년 간 기본 지원금(연간 약 420억 호주달러)에 29억 호주달러(약 2조 4,706억원) 추가 지원
  - 2014년 토니 애벗 정부의 공공병원 재정지원(570억 호주달러) 삭감으로 의료서비스 및 시설유지 문제를 고려 추가 지원 공약
- (노동당) 향후 4년간 기본 지원금에 49억 호주달러를 추가 지원 주장
- (현지반응) 29억 달러가 삭감된 570억에는 못 미친다는 의견 다수. 호주 750여개의 공공병원에 대한 실질적 효과 의문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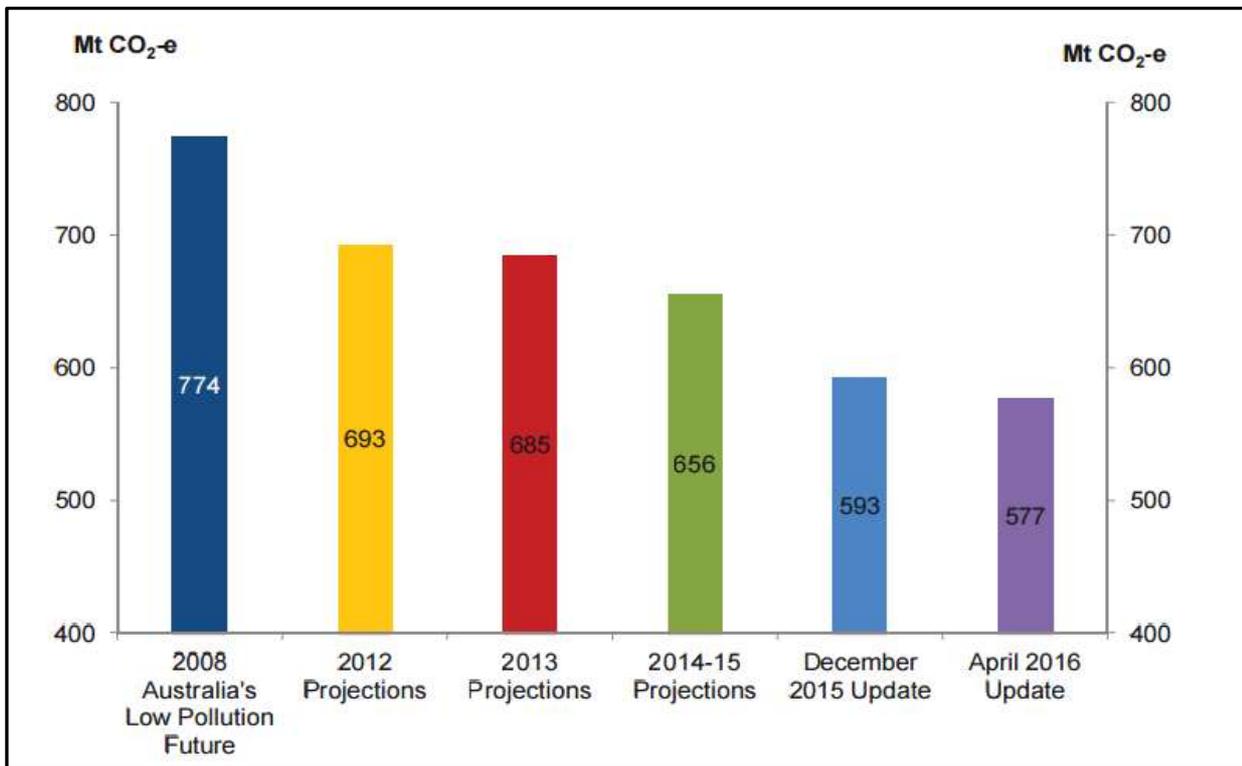
### □ 영상진단 및 혈액검사 지원금, 6억 5천만 호주달러 삭감

- (자유국민연합) 2016년 7월부터 영상진단 및 혈액검사 지원금 6억 5천만 호주달러 삭감, 향후 4년간 의료 연구 미래기금으로 사용
  - 호주병리학회 및 호주영상진단협회는 관련 의료기기 임대 규정의 간소화와 메디케어 환급제도에 대한 재검토 조건으로 자유국민연합의 정책 수용
- (노동당) 지원금 현행 유지, 10년 간 총 29억 호주달러 지원 주장
  - 영상진단 및 혈액검사 지원금 유지하고, 향후 4년간 8억 8천 420만 호주달러 지원, 2026-27년까지는 총 29억 호주달러를 지원 공약
- (예상결과) X-ray, MRI, CT 촬영 및 혈액검사 비용 발생
  - 기존에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던 혈액검사와 X-ray촬영에 각각 20 호주달러와 56 호주달러의 비용 발생해 국민 부담 증가 예상

**3 환경 · 재생에너지 정책 : 온실가스 감축, 재생에너지 목표**

-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수적 설정, 감축 기업 대상 정부 지원 실시
  - (자유국민연합)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~28% 감축
    - 온실가스 감축 진행 기업 대상, 25억 호주달러(약 2조원) 보상안 제시
  - (노동당)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005년 대비 45% 감축,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% 달성을 공약

< 호주 2019-2020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변화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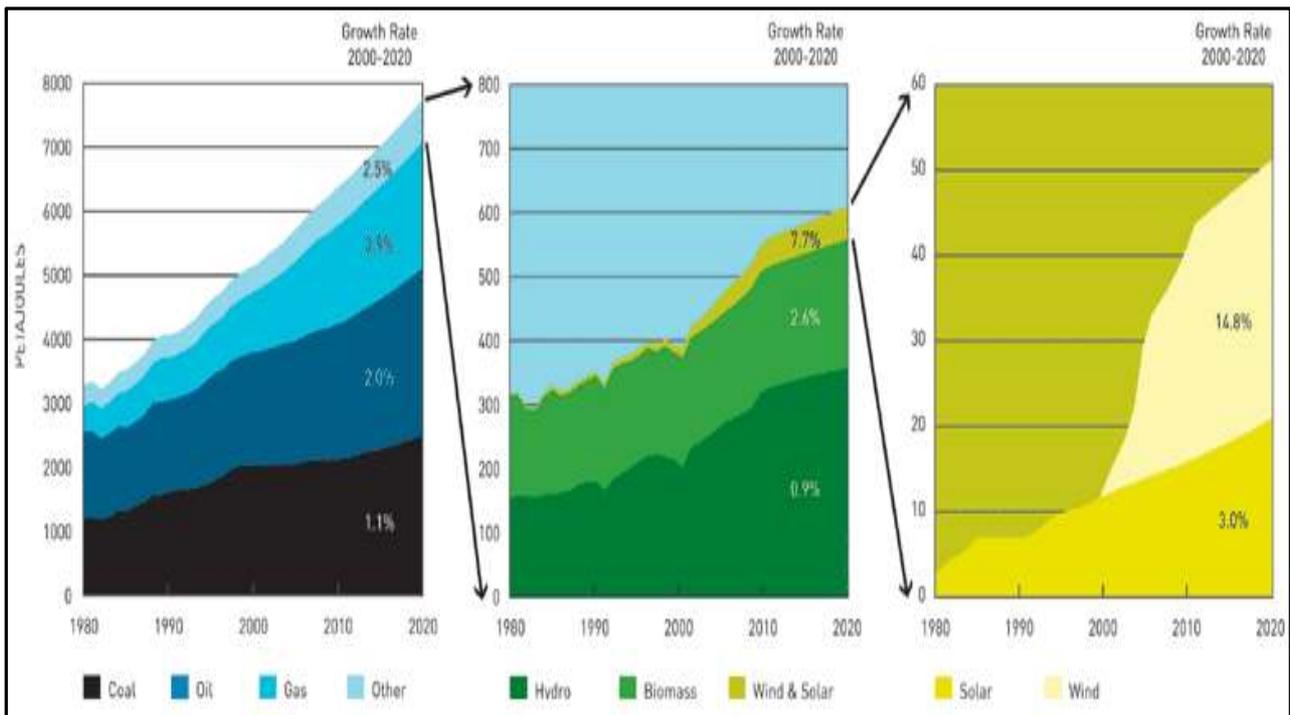
[자료원 : 호주 환경부(Department of Environment), Tracking to 2020 Report]

- (예상효과) 노동당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보수적 설정이 예상되는 가운데,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예산 배정으로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

□ 재생에너지 목표 보수적 설정해 광산업·제조업 부담 완화

- (자유국민연합) 2020년까지 전체 전력 대비 재생에너지 생산을 20% 이상 달성 공약
  - 2015년 총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14.6%로 2014년 13.5%대비 증가. 향후 2020년까지 20% 달성을 위한 자금 지원 예상
- (노동당)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사용률을 50% 달성 공약
- (예상 효과) 재생에너지 사용률 상승으로 관련 산업 성장 전망, 노동당 대비 보수적인 목표 설정으로 전력 소비가 높은 광산업, 제조업 기반 산업계의 부담 완화 예상

< 호주 에너지 소비 예상치 (종합/재생에너지/태양력 및 풍력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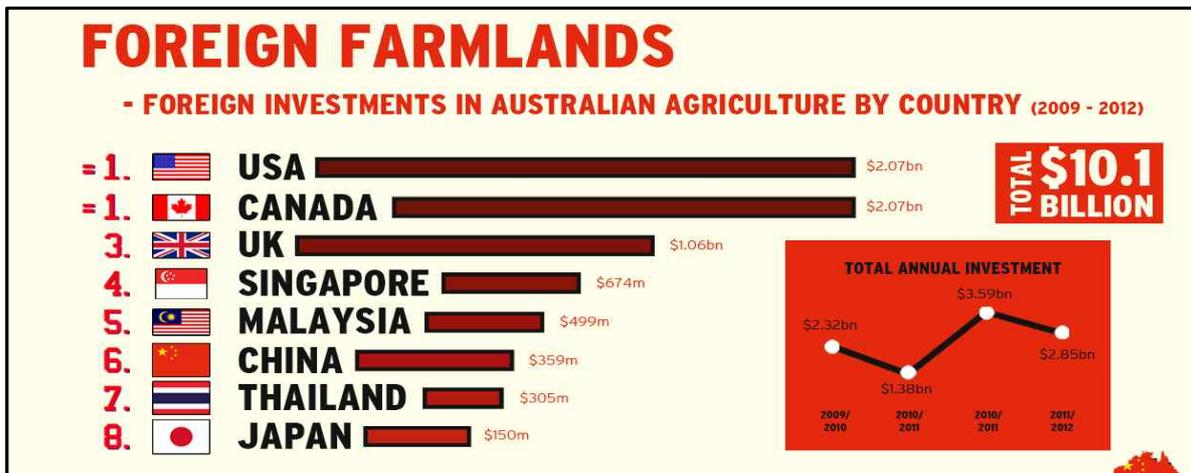
[자료원 : 호주 농업수산자원부(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)]

**4 농업 정책 : 외국인 농지 비율 제한, 워킹홀리데이 세금 인상**

□ 외국인 농지 투자자에 대한 정밀조사 범위 확대

- (자유국민연합) 한중일 투자자 대상 더 엄격한 조사 기준선 제시
  - 외국인 농지 구매에 대한 투자심의위원회 정밀 조사 기준선을 2015년 12월 투자누계액 2억 5천 2백만 호주달러에서 한국, 일본, 중국인 투자자 대상 누계 1천 5백만 호주달러로 낮춤
  - 2016년 1분기 중국 기업의 농업분야 인수 투자금이 지난해 농업 투자분을 초과하는 등 투자 열기가 상승

< 해외자본의 對호주 농지 투자 동향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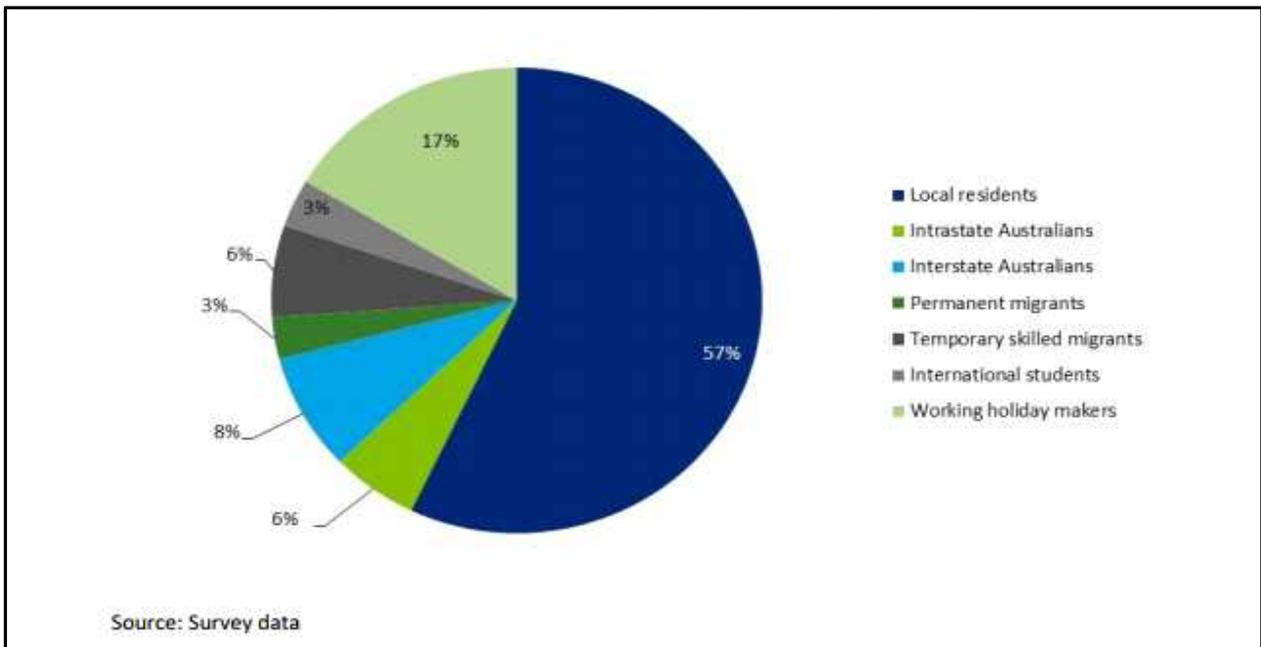
[자료원 : 호주 투자청(FIRB), Annual Report 2014-15]

- (노동당) 자유국민연합 대비 농지 · 농장 조사 기준선 완화 주장
  - 농지 구매의 경우, 한중일 투자자에 대한 정밀 조사 기준선을 5천만 호주달러로 상향 조정
  - 농장 구매의 경우, 5천 5백만 호주달러 넘는 농장 구매 검열 철폐 촉구
- (예상효과) 외국인 농지 투자자에 대한 엄격한 조사로 호주 농지 구매가 까다로워질 전망

□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소득세 인상

- (자유국민연합) 2017년 1월부터 워킹홀리데이 인력의 소득세 면세 기준을 폐지, 0~80,000 소득 구간에 대해 32.5%를 과세
  - 현행 제도 : 워킹홀리데이 인력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어 소득 0~18,200 호주달러 구간은 세금 면제, 18,201~37,000 호주달러 구간은 19% 세금 지불. 저소득자는 세금 일부를 환급 받음
  - 자유국민연합은 워킹홀리데이 세금 인상으로 향후 4년간 5천 4백만 호주달러 이상의 세수 손실회복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
- (협회반응) 호주농민협회(National Farmers' Federation)는 호주 농장 인력의 1/4를 차지하는 워킹홀리데이 인력 급감을 우려
  - 자유국민연합의 세수 확충 의도는 높은 과세로 인한 워킹홀리데이 인력 유입 감소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

<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의 노동 인력 분포 >



[자료원 : Deloitte Access Economics - Australian Tourism labour force report 2015-2020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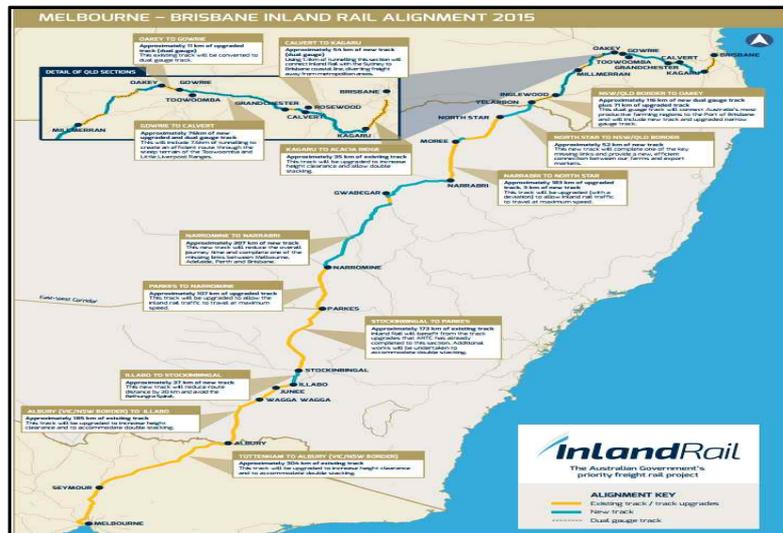
- (예상효과) 호주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수가 급감 예상

**5 인프라 정책 : 전국적 인프라 사업, 광통신망 프로젝트 사업**

□ 전국 500억 규모 인프라 사업 진행

- (자유국민연합) 철도 및 도로 개선을 위한 500억 호주달러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
  - 도로 복구, 철도 설치/복원, 도로 건설/확장, 공항 건설 대상. 도로 복구 작업에만 향후 4년간 32억 호주달러 투자 예정
  -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: 시드니 제 2공항 건설, 퍼시픽 하이웨이(Pacific Highway) 확장공사, 퀸즐랜드 주의 브리즈번과 빅토리아 주의 멜버른을 잇는 내륙 철도 건설, 서 호주 퍼스 지역의 화물전철 2로 건설 등
- (노동당) 인프라 산업에 대한 지속 지원과 필요 시 정부의 추가 지원(투자)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
- (예상효과) 주요 프로젝트가 지속 진행될 예정. 일자리 창출, 용접, 건설 자재, 철광 등 인프라 및 건축시장 관련 제품의 수요 증가 전망

< 호주 멜버른-브리즈번 내륙철도 건설 계획 >



[자료원 : 호주 인프라·지역개발 정부 홈페이지]

□ FTTN(Fibre-To-The-Node) 방식의 광통신망(NBN) 프로젝트 추진

- (자유국민연합) 호주 최대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인 광통신망(NBN) 프로젝트를 FTTN 방식으로 지속 추진
  - FTTN은 각 지역의 주요 Node까지만 광케이블로 연결하고, Node부터 가정까지는 기존의 구리선과 전화선 활용하는 방식
  - 2009년 노동당 발표 안 대비 광케이블 연결 범위를 축소
- (노동당) FTTN 방식에 대한 비판 및 광케이블 추가 설치 주장
  -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비용 증가가 초래되었다고 비판
  - 2022년까지 200만 가정 및 사업체에 대한 추가적 광케이블 연결을 공약
- (예상 효과) NBN 프로젝트는 기존 FTTN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

< 광통신망(NBN : National Broadband Network) 프로젝트 >

- 2009년 초 노동당이 발표한 호주 최대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
- 총 8년간 4백30억 호주달러 투입 계획
- 호주 인구의 93% 이상을 포함하는 지역을 기존 1Mbps에서 100Mbps 통신 속도로 변경
- 2013년 9월 자유국민연합으로 정권 교체되면서 FTTN(Fiber-To-The-Node) 방식으로 계획 수정됨

### III 주요 산업별 반응

산업구분	총선에 대한 반응	
자동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남호주자동차무역협회) 자유연립당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라 자동차업계 4,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 기대</li> <li>- 법인세 감면, 사업장 관련법 개정, 자동차기준법 현행 유지, 인력 훈련 다양화, 산업 전략 수립 촉구</li> </ul>	환영
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전기노동조합) 호주건축건설위원회(ABCC) 재발족과 건축 기준 조례 개정에 대한 우려 표명</li> <li>- 추가 비용, 인허가, 부가적 행정, 노동자 권리문제 등을 우려</li> </ul>	우려
식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호주식료품의회)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로 식료품 유통 활성화 기대</li> <li>- 멜버른-브리즈번 간 직통 화물 수송 철로 신설로 운송료 절감 기대</li> </ul>	환영
광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호주광물협회) 자유연립당의 법인세 감면 정책, 경기 부양책 지지</li> <li>- 환경·재생에너지 정책 관련, 노동당 대비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한 자유국민연합 기조 환영</li> </ul>	환영
재생에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호주태양광협회)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목표에 따라 산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. 노동당 대비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한 자유국민연합에 대한 아쉬움 표명</li> <li>- 클린에너지 금융공사와 호주재생에너지기구 존치, 클린 에너지혁신기금 신설 환영</li> </ul>	보통

## □ (자동차) 자동차업계 4,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

- (남호주자동차무역협회) 자유국민연합의 일자리 창출 계획 지지
  - 남호주자동차무역협회(The Motor Trade Association of South Australia)는 자유국민연합의 일자리 창출 계획(Youth jobs PaTH Program)\*의 현행 유지를 지지
  - 2017년 1월부터 청년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한 업체에게 주어지는 6,500호주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될 시 자동차업계에서 4,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 기대
- \* 일자리 창출 계획 : 2016-17 연방예산안에서 제시된 계획으로, 840백만 호주달러를 투입해 120,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
- 남호주자동차무역협회는 이번 총선과 관련하여 ‘자동차업계 미래를 위한 일자리(Automotive Jobs for the Future)’ 가이드라인을 발표

### < ‘자동차업계 미래를 위한 일자리 가이드라인’ 6대 지향점 >

- ① 고용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면
- ②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장 관련법 개정
- ③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
- ④ 자동차기준법(Motor Vehicle Standards Act (1959))의 현행 유지
- ⑤ 차세대 자동차산업관련 인력의 육성을 위한 훈련 및 연수 다양화
- ⑥ 자동차 산업의 전반적 전략 계획 수립

## □ (건설) 호주건축건설위원회 재발족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

- (전기노동조합) 호주건축건설위원회 재발족 및 건축기준 조례 개정 우려
  - 호주 전기노동조합(Electrical Trades Union)의 건설 분야 조합원들은 위원회 재발족으로 발생 가능한 추가적 비용 및 인허가 문제, 기타 부가적 행정 처리, 노동자 권리 침해, 정부 기관 권력 남용 문제 지적

- \* 호주건축건설위원회(ABCC : 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) : 2005년 건설건축업계의 불법적 행동 감시를 위해 설치된 독자기구로, 노조 감사와 벌금 부과 권한 보유. 2012년 해체 후 2014년, 2016년 2차례 재발족 시도가 무산되면서 2016년 상하양원해산, 조기총선의 시발점이 됨
- (자유국민연합) 위원회 재발족 및 건축 기준 조례 개정을 통한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성을 제고, 시공 기간 단축, 절세 효과를 강조

#### □ (식품) 2016-17 예산안 및 법인세 · 소득세 인하 조치 긍정적 평가

- (호주식료품의회) 2016-17 연방 예산안 및 법인세 · 소득세 인하 환영
  - 호주식료품의회(the Australian Food and Grocery Council)는 2016-17 연방 예산안의 기업 투자 증대 10개년 계획이 호주 경제 성장과 예산 균형의 근간을 제공한다고 평가
  - 자유국민연합의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조치는 식료품 유통을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매우 호의적으로 반응
  - 2016-17 예산안의 인프라 투자 계획 일환인 멜버른-브리즈번間 직통 화물 수송 철도가 신설될 경우, 소비재의 운송료가 크게 절감될 것임을 강조

#### □ (광산업) 자유국민연합의 경기부양책, 환경 ·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 지지

- (호주광물협회) 자유국민연합의 경기부양책이 광산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, 노동당 대비 소극적인 환경·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지지
  - 호주광물협회(Minerals Council of Australia)는 자유국민연합의 법인세 감면 조치를 비롯한 경기부양책이 침체된 광산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
  - 환경·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온실가스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노동당 대비 소극적으로 설정한 자유국민연합 집권을 환영
  - 정부의 광산개발 환경승인 절차의 간소화를 촉구하겠다는 입장

□ (재생에너지)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목표 설정에 긍정적으로 반응

- (호주태양광협회장)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률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산업 전망 긍정적으로 평가
-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치가 노동당 대비 자유국민연합이 낮지만, 자유연국민연합의 클린에너지 금융공사(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), 호주재생에너지기구((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) 존치와 클린에너지 혁신기금 신설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

< 존 그라임스\* 호주 태양광협회장 KOTRA 인터뷰 >

\* 호주 에너지저장시스템 협회장 겸임

Q : 호주 주요 정당의 총선 공약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어떤 영향 줄 것인가?

A : 정당에 관계없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상승할 것이기에 산업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됨

Q :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한국-호주 무역과 투자에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?

A : 호주의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은 한국의 기술선도 기업의 호주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. 특히 한국은 변압기, 태양전지 패널과 에너지 저장 분야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음

□ (한인사회) 코리안 가든 사업 추가 지원 공약 환영

- (한인사회) 코리안 가든 사업 추가 지원 공약한 자유국민연합 승리 환영
  - \* 코리아 가든 사업 : 올림픽파크 인근 스트라스필드 카운슬 브레싱턴 파크 일부에 한인회관, 회의장, 전시장, 야외 공연장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
- 자유당 줄리 비숍(Julie Bishop) 호주 외무장관은 자유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동 사업에 100만 호주달러 추가 지원 의사를 밝힘
- 옥상두 시장(코리아 가든이 위치할 스트라스필드 시장을 역임)은 ‘여당, 야당의 승리와 관계없이 지역개발 및 한인 사회 결집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코리아 가든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’ 는 입장을 표명( ‘16.6.27, KOTRA시드니 무역관 인터뷰)

## IV 시사점

### 1. 우리기업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

□ (기회요인) 현지의 우리나라 진출기업 법인세 인하 혜택 전망, 자동차·가전·병원 일반 소모품·재생에너지·건설시장 유망

- 자유국민연합 경기부양정책 : 현지 진출기업 및 對호주 수출에 긍정적
  - 호주 법인세가 향후 10년에 걸쳐 현행 30%에서 25%로 단계적 인하될 예정. 법인세 인하가 국내외 기업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므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호주 내 활동 여건이 개선될 전망
  - 중산 및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으로 해당 구간의 가처분 소득 증가 예상. 일반 소비재나 식품 등 가계 수입에 크게 관계없이 지출되는 제품 대비 우리의 對호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, 가전 등 고가제품 수요 증가 전망

#### < 對호주 수출 상위 10대 품목 >

(단위 : 백만 달러, %, MTI 4단위)

연번	품목명	2015		2016 (6월)	
		금액	증감률	금액	증감률
	전체	10,831	5.3	3,742	△37.1
1	승용차	1,675	△5.7	1,068	△24.1
2	경유	1,827	△26	482	△44.8
3	휘발유	1,376	49.8	459	△27.6
4	제트유및등유	678	△4.5	202	△33.1
5	철구조물	1,053	21.6	136	△74
6	자동차부품	193	△17	97	△7.1
7	화물자동차	133	85.2	86	22.6
8	칼라TV	78	△21.4	74	55.5
9	합성수지	122	△16.5	54	△16.4
10	축전지	92	5.9	49	△0.5

[자료원 : 한국무역협회]

○ 공공병원 지원금 확대 : 의료기기 수입 수요 증가 전망

- 자유국민연합은 의료 및 의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한 바, 의료산업과 관련된 일반 소비제품 및 소형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단,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소모품의 경우, 중국 및 동남아시아 제품들과 견줄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

< 호주 의료기기 연도별·국가별 수입 동향 >

(단위 : 백만 달러, %)

순위	국가명	수입액				점유율	증감률	
		'13년	'14년	'15년	'16년 (1-5월)		'15년	'16년
1	미국	912	909	838	347	40.68	△7.90	5.27
2	독일	174	206	199	78	8.92	△3.04	8.50
3	멕시코	86	119	146	61	6.98	22.34	7.68
4	중국	84	101	86	42	4.01	△14.83	29.50
5	일본	113	109	102	41	5.18	△6.48	△1.54
19	한국	8	10	12	5	0.71	17.64	1.12

[자료원 : GTA]

< 일반 소형 의료기기 >



[자료원 : 호주 온라인 의료기기 판매 홈페이지(www.medshop.com.au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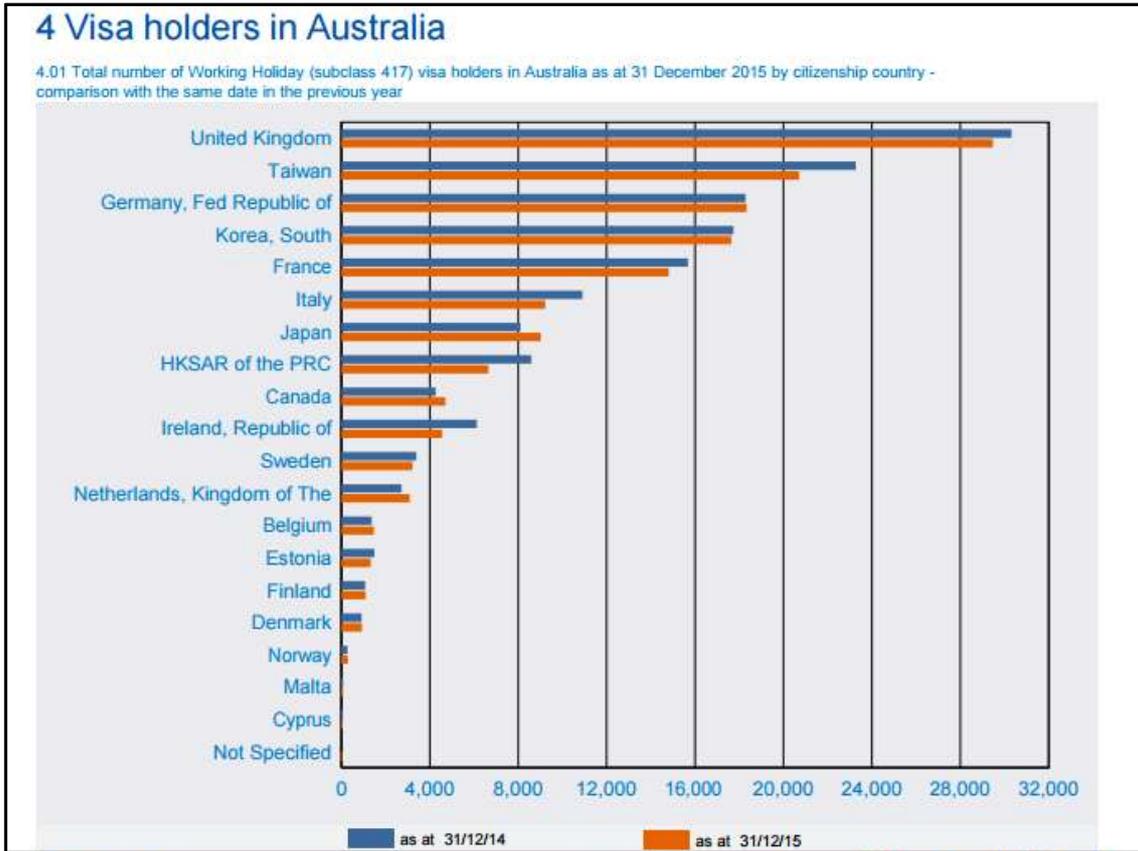
- 재생에너지 사용률 상승 : 재생에너지 기술선도 기업 유리
  -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률 20%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기대되므로, 호주 재생에너지 시장 전망이 밝음. 변압기, 태양전지 패널, 에너지 저장에 강점이 있는 한국 기업의 호주 진출 기회 확대 기대
- 대규모 인프라 사업 지속 : 프로젝트 및 기자재 시장 유망
  - 도로보수, 확장, 건설 등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인프라 사업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투자할 것으로 전망됨. 이에 따른 용접, 건설 자재, 철광 등의 시장에 대한 우리기업 참여 기회 확대 기대

□ (위협요인) 영상진단기기 및 병리학 제품 수요 감소, 호주 농지 구매 조사 강화, 호주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세금 부담 급증

- 영상진단 및 혈액검사 지원 삭감 : 관련 제품 수입 수요 감소
  - 무료로 가까웠던 혈액검사 및 X-ray가 진료비 인상에 따라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, 영상진단기기 및 병리학 관련 제품에 대한 공공병원의 수요는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전망
- 외국인 농지 구매 절차 강화 : 농업 관련 투자가 까다로워짐
  - 2015년 12월 외국 자본의 농지 구매에 대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정밀 조사(scrutiny) 기준이 대폭 강화됐으며, 한중일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선이 제시되어 우리 투자자의 농업 진출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
- 워킹홀리데이 과세제도 개편 : 호주 워홀러의 세금 부담 급증
  - 백패커 택스(Backpacker Tax) 과세제도 개편이 예정대로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워킹홀리데이 입국자(0~80,000 호주달러 소득) 대상 소득세를 현행 0 또는 19%에서 32.5%로 인상

-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세금 부담 급증으로 한국의 對호주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수 감소 전망. 캐나다, 영국, 뉴질랜드 등 비자 발급 조건이 완화된 타 영어권 국가를 대체 선택하는 인구 수 증가 예상

< 호주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동향 >



[자료원 : 호주 이민성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]

< 우리나라 對호주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동향 >

(단위 : 명)

구 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	누계('05~'15)
입국자 수	34,870	30,527	34,234	33,284	24,146	24,568	444,044
증감률 (전년대비)		△ 11.7%	△ 12.4%	12.1%	△ 2.7%	△ 27.4%	1.7%

[자료원 : 외교부]

## 2. 시사점

### □ 총선 평가

- 집권 자유국민연합 텀불 총리의 정책 추진에 대한 유권자의 실망이 2016 조기 총선의 여야당 대접전으로 이어짐
- 자유국민연합이 하원 의석의 절대 과반을 차지하면서 가까스로 재집권에 성공하여 1기 정부 대비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전망

### □ 정책 방향

- 법인세·소득세 인하 등 경기부양책 실시에 적극적인 반면, 복지 및 환경 정책 추진에는 야당(노동당) 대비 소극적이므로 親기업적인 정책 기조가 지속될 전망
- 우리나라 교역·투자·인적 교류 측면에서는 자유연립당의 농업 관련 정책(외국인 호주 농지 투자 조사 기준 강화,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소득세 인상)에 주목할 필요

### □ 현지 산업계 반응

- 자유국민연합 승리에 대해 자동차·식품·광산 업계는 환영, 재생에너지 업계는 아쉬움, 건설업계는 우려를 표명

### □ 우리기업 시사점

- 자유국민연합의 경기부양책 실시는 우리 기업의 수출과 진출 전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, 자동차·가전·의료기기·재생에너지·건설과 같은 유망 시장 공략 필요

작성자

- ◆ 시드니무역관 이지원 과장
- ◆ 아대양주팀 오승희 사원

Global Market Report 16-042

2016 호주 조기 총선에 따른  
정책방향 및 시사점

발행인 | 김재홍  
발행처 | KOTRA  
발행일 | 2016년 7월  
주소 |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 
(06792)  
전화 | 02) 1600-7119(대표)  
홈페이지 | www.kotra.or.kr

ISBN : 979-11-87219-96-5 (93320)

Copyright © 2016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
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

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

## Global Market Report

---

# 2016 호주 조기 총선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

---